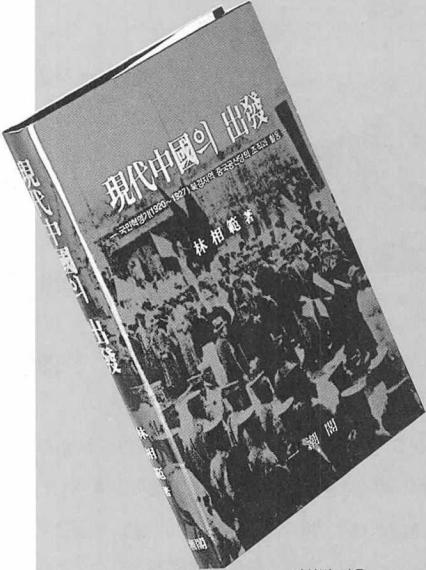


## 공산당과 사회집단과의 권력관계 주목 중국공산당의 한계 지적에 치중해

《현대중국의 출발》



임상범 지음  
일조각/A5신/338면/18,000원

한국에는 사회주의 중국을 보는 독특한 눈이 있다. 냉전시기 한국은 미국의 '사회주의 중국부정론'을 수용했다. 근대화론에 입각해 '자본주의로의 길'을 근대의 필연으로 상정하고 중국의 사회주의화는 역사의 보편성에서 일탈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 시기 중국 공산당에 관한 담론은 국가가 장악했고, 권력담론은 '죽의 장막'을 두르고 있는 철의 규율을 전시하는데 몰두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에도 한국의 냉전적 지적 지형도는 여전히 철옹성이었다. 한국의 대표적 중국사 개설서인 『강좌중국사』가 중국공산당을 독립적인 장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단적인 예다. 한국사회의 식민지화와 타율적 근대화가 낳은 산물을 극복하는데 중국 혁명의 성공요인은 중요한 참고서인데도 지금까지 연구는 기피돼 왔다.

이런 점에서 중국공산당을 직접적으로 다룬 이 책은 출판 자체만으로도 연구사적 가치가 있다.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수상록이고, 서진영의 『중국혁명사』가 2차사료를 주로 이용한 개설서인데 반해, 이 책은 1차사료를 이용한 본격적인 중국공산당 연구서다. 중국공산당이 창단된 1921년부터 국공합작이 결렬되는 1927년 까지 북경의 공산당 활동을 살피고 있는 이 책에

서 주목되는 점은 존슨(C. A. Johnson)을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학자들이 강서, 연안 시기를 연구 시기로 삼는데 반해 국민혁명기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중국이나 미국학자들과 달리 이 연구의 목적이 중국공산당의 승리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닌데 기인한다. 공산당이 사회 각 집단과 어떤 권력관계를 형성 했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석보다 객관적 사실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적 역사학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승리의 원인에 무관심함에도 이 책은 민중의 자발성보다 공산당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지도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어떻게 농민의 지지를 창출했는가를 살펴본 셀던(M. Selden)의 그것에 가까운 방법론을 택함으로써 공산당의 계몽적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중국사를 연구한다는 것 이 결코 뉘록잖은 일임은 이 책도 예외없이 보여준다. 해석보다 발굴에 치중하고 있지만 그 발굴은 다시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중공중앙과 청년단, 지방과 중앙당원, 코민테른과 공산당, 당과 사회 각 단체 간의 갈등을 묘사하는 데 상당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결국 "파괴와 건설"의 이중주라는 이택후(李澤厚)적 '사회주의 중국부정론'을 채택한 후 중국공산당의 '건설'보다 '한계'를 발굴하는 데 치중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지배자가 권력을 갖게 되는 기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지배의 신화'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이라는 지배의 신화를 극복하는 데는 일정 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국내 연구의 공백상황'을 고민한 학자였음에도 결국 한국학계의 '사회주의 중국부정론'이라는 지배자를 극복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 김희교

광운대 중국학과 교수. 역서 『현대중국을 찾아서』, 논문 <'멸양'에서 '반미'로 : 민중설화로 본 청말민중사회> <미국상품불매운동과 미국의 대중국정책> 외.

## 중국 가족의 역사적 성격 규명 국가이념에 입각한 가족관은 한계

《중국가족제도사》



서양길 지음 | 윤재석 옮김  
아카넷/A5신/812면/35,000원

최근 인류의 다양한 '문화'를 확인함으로써 인간과 문명을 폭넓게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역사학의 의미가 새롭게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사·생활사 등의 영역이 정치사나 사회경제사의 영역과 비교해 좀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 가족사의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테마다. 그러나 관심에 비해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사분야는 연구방법에 관한 이론적 토론이 드물었던 만큼, 실질적인 연구경향이나 성과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중국사 연구에서 가족사는 대체로 정치경제사의 보조적 차원에 머물렀다. 즉 생산과 생활단위로서 사회경제적 구조나 국가권력의 지배대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보여왔다. 따라서 가족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경우는 드물었다.

물론 생산과 지배관계에서 시대에 따라 가족이 상당히 독자적인 작용을 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나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현실이지만 당위는 아니었다. 때로는 이념에 근거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입장이나 국가의 입장에서도 이념적인 사회발전을 저

해하는 존재로 인식됐다. ‘가족주의적 국가관’ ‘봉건가족제도’ 등의 표현에서 보듯, 부정적인 수식어가 곧잘 붙어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었다. 가족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1992년 출판된 서양결의 《중국가족제도사》는 일단 매우 주목되는 연구성과다. 가족을 대상으로 전시대를 망라하는 개설서기 때문이다. 내용면에서 국가 사회에 관련된 가족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 가족의 시대적 차이와 특징을 명쾌하게 종합 정리했다. 막연히 제도적 실체만을 나열하거나, 앞뒤 시대와 무관하게 한 시대만을 정리하고 그쳤던 이전 연구보다 한 단계 진일보했다.

그러나 역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서양결의 연구는 극히 사회주의적 국가건설이념과 마르크스주의적 가족관에 입각해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계획하에 인민출판사에서 이 책을 출판했던 사실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현재의 사회주의 중국에 와서 비로소 해소되는 봉건가족제도라는 관점이 여전히 책 전체에 걸쳐 흐르는 주된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현재의 정치적 목적조차 내포돼 있는 측면도 보인다. 중국 가족사를 정리한 기본자료로서 손색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저자의 투철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가족관은 중국 가족사연구에서 또다시 극복해야 할 과제를 좀더 선명히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역자 윤재석은 고대사를 중심으로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성과를 계속 발표해왔다. 본서의 번역과정에서도 저자의 오류를 상당히 바로 잡는 등, 연구자로서 흡집을 데 없는 자세와 능력을 보여줬다. 역자후기에 중국 가족사의 이해에 좋은 길잡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자의 관점에서 보이는 위험성과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다음 단계의 중국 가족사연구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 김유철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논문 〈중국사에서 예속민과 신분제〉 〈위진 남북조 시대 강남사회와 종족문제〉 외.

서평

## 유럽 신사회운동 과정 정리 · 평가해 신사회운동의 저항성과 급진성 부각

### 《정치의 전복》



조지 카치아피카스 지음 | 윤수중 옮김  
이후/A5신/460면/14,000원

이 책은 유럽에서 전개돼 온 신사회운동의 역사와 기원, 전개과정과 성격 등을 서술·평가한 책이다. 저자는 현장 체험과 활동가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운동을 조사·연구했고, 그 결과를 이론적 평가와 함께 엮었다. 그래서 여러 사건과 운동들이 실황증계되는 것처럼 생동감있게 서술·소개되고 있다.

저자는 신사회운동이 1960년대 말 프랑스·이탈리아·독일 등 유럽 여러 지역에서 반전·평화·반체제·개혁·해방 등을 외치며 일어난 시위, 파업, 폭동에서 연원한다고 본다. 그리고 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다 소멸한 이탈리아의 저항적인 사회운동, 소요사태, 테러리즘을 통해 이어지고, 80년대에 와서 독일을 비롯한 네덜란드, 덴마크 등 중북부 유럽의 ‘신사회운동’으로 이어져 본격화된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또 1990년대에는 주로 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서 주택점거 운동을 통해 이어진다고 본다. 이 책의 2장부터 5장까지는 바로 이런 역사적 기원과 전개과정, 그 사이에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들과 경과, 쇠퇴 과정 등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운동 과정을 보면, 서구의 신사회운동이 그동안 한국에서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매우 급진적

이고 전투적인 방식으로 전개돼 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서구의 대표적인 신사회운동(환경·평화·여성·공동체 운동)은 많은 경우, 경찰의 곤봉세례를 맞으며 진행됐고, 바리케이트와 무단점령 및 점거를 통해 발전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이고 온건한 시민운동과는 판이한 양상을 지녔다. 이 점에서는, 1980년대 한국의 학생운동이나 철거민, 농민, 노동운동과 유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여러 종류의 신사회운동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과거와는 달리, 가장 주목을 적게 받아온 유형의 운동, 즉 주택점거운동을 비롯한 ‘대안적 공동체’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신사회운동에서 가장 전형적인 운동이라고 해석한다. 저자는 신사회운동의 가장 큰 특징을 자율성이라 집약하면서, 과거 이탈리아와 독일의 명칭(아우토노미아, 오토노미)을 따와 신사회운동을 ‘자율운동’이라 부른다. 이 운동은 곧 기성의 정당정치와 대의제 민주정치에 대한 불신, 나아가서는 저항과 전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책의 제목 ‘정치의 전복’도 이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저자는 이런 운동의 기본성격을 하버마스의 이론을 통해 해석해 한편으로는 ‘생활세계의 식민화’,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저항’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 이 책은 하버마스의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경험적인 연구서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논란의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신사회운동을 자율운동으로 본 점, 어떤 운동이 신사회운동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점, 점거운동처럼 주목받지 못했던 ‘주변적’ 신사회운동을 부각시켜 운동사적으로 정리·소개한 점, 그 급진성과 전투성, 저항적 성격을 잘 드러내 준 점 등은 매우 참신하다. 한국의 독자들, 특히 시민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여러 면에서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사회운동에 대한 국내의 기존관념을 ‘전복’ 시키는 책이다.

## 유팔무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저서 《사회학》(공저), 논문 〈사회주의 봉괴와 대안체제의 모색〉 〈한국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분석틀의 모색〉 외.

서평

19